

박근혜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

구조개혁으로

"진짜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정권인수기구 설립, 국민내각 구성!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100만 군중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 모두는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권은 식물정부 상태로 명목상의 법적 지위만 남아있을 뿐이다. '박근혜 퇴진'은 더 이상 구호로만 외치는 요구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갑론을박의 이유는 박근혜 퇴진 이후 사회에 대한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친 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한국의 적폐를 해소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였다. 하지만 일부 세력은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굴면서, 박근혜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과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1. 박근혜 직무 정지, 새누리 국정 배제

박근혜는 거국내각 운운하던 순간에도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까지 마쳐버렸다. 불과 3주 만에 날치기로 추진된 협상이다. 박근혜 일당은 여전히 어떻게 나라를 더 망칠 수 있을지 골몰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가 아무 짓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박근혜가 집무를 중단하면 당장 국정 운영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지 않다. 박근혜가 일조차도 더 오래 직무를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다.

새누리 비박 세력은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마냥 박근혜와 선을 그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 집단은 지금 이순간에도 박근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매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는 집단이다. 새누리 전체가 매국 부역세력이다.

새누리 일당은 향후 정국에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와대와 함께 모든 국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민중들이 이에 대해 단호하게 요구해야 실질적인 박근혜 퇴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2. 조건 없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2선 후퇴, 책임 총리 운운은 박근혜-새누리당에 호흡기를 달아주려는 시도일 뿐이다. 탄핵도 마찬가지이다. 탄핵은 절차상 국회를 통과(200명 이상 찬성)해야 하고, 다시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해서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청와대에 편향적으로 종속된 헌법재판소 구성상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 또한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구사일생의 기회를 주게 된다. 새누리당, 청와대가 탄핵 절차를 밟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현 국면에서 탄핵은 민중의 대안일 수 없다.

우리의 선택지는 '조건 없는 퇴진'이다. 박근혜는 퇴진의 시기를 명료하게 하고, 퇴진 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퇴진 이후에는 새로운 국민내각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3. 민중 주도 정권인수기구 설립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어떤 기구에서 누가 주도할 것인가이다. 당연히 부역자 집단 새누리당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민주, 국민의당 또한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는 데에만 골몰하며 국정농단 집단을 방조한 세력이다. 12일 백 만 촛불이 타오른 이후에도, 더민주는 자신들이 백 만 촛불을 대표하는 양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타협을 모색하며 국정농단 세력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를 준비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제단체와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 즉각 정권인수기구(가칭 정권인수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퇴진 절차와 이후 새로운 내각 구성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당연히 민중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기구가 될 것

이다. 야2당은 이 기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민중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시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 퇴진 전 총리 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위원회에서는 퇴진 전 총리 선임부터 퇴진 이후 국민내각 구성, 박근혜 부역 세력 처벌, 가짜 정책 무효화 등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모든 소임을 다하게 된다. 구호로만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게 아니라면, 박근혜 퇴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정국을 움직인 것은 민중의 힘

열거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에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거리에 모인 민중들이다. 최순실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부역자들은 최순실의 죄악을 부정하며 최순실을 참고인 소환하려 했었다. 하지만 최순실은 구속되었다. 모든 의혹을 부정하던 박근혜 역시 지금은 소환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청와대의 거국내각 제안을 만지작 거리며 눈치보던 두 야당도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돌이켜보면, 11월 5일 20만, 12일 100만, 거리에 모이는 시민의 숫자가 예상을 뛰어넘을 때마다 청와대-여당-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전적으로 민중들의 힘이다. 절차상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며 비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1달 전만 해도, 청와대 인사가 줄줄이 구속되고 현 정권이 식물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든 평론이 다음 날이면 깨끗이 폐기되는 시국에 우리는 서있다.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 역시 전적으로 우리들의 향후 행동에 달려있다. 지금은 평론할 때가 아니라 거리에 모일 때이다.

과거사 청산 기회 놓쳐선 안돼 박근혜 구속! 부역자 처벌!

한국은 한 번도 제대로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불의한 자에게 부역했던 세력이 부와 권력을 소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박근혜를 비롯한 주변 세력은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에 부역했고, 독재정권 하에서는 독재세력에 부역했던 집단이다.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대한민국 구조개혁은 박근혜를 비롯해 부역자 전원을 처벌하고 그 과오를 청산하는 데서 출발한다.

박근혜 구속

박근혜는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일 수 없다. 이미 헌법을 위반하는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각종 금품, 인사 비리가 밝혀졌고, 박근혜가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에 나섰다. 이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엎고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증거 인멸 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 사유다.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해체:새누리 의원 전원 사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 부역자였다. 정권의 비리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집단이다. 김무성 전대표는 최순실 보도가 시작되자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딴습니까?” 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와 선을 그으며 자신들은 무관한 것처럼 구는 인사들 역시 정권의 국정 파탄을 옹호하며 협조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옹호했던 청와대의 정책이란 게 근본 없는 국정개입의 소산이었다. 영혼 없이 청와대를 떠받들던 이들은 국회의

원의 자격이 없다. 이들은 박근혜로 꼬리자르며 당명 변경, 재창당 등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을 해체하라는 것은 새누리 소속 모든 의원이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이다.**

부패 정치검찰 개혁

정치검찰은 국정농단 범법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간을 줬고, 심지어 피의자인 우병우를 공손하게 접대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언제나 수사기관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는 사병(私兵)집단이었다.

검찰은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백남기 농민에게는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중총궐기가 정권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이용하여 정권과 결탁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온갖 향응과 청탁으로 부패한 집단이기도 하다. **부패 정치 검찰을 도려내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부역 언론 엄단

언론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부역집단이다. 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지상파 언론은 지금도 박근혜를 뉴스에 다루지 않고 있다. 조중동 및 종편은 하루종일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지만, 박근혜에게 '형광등 백 개를 쬐 놓은 듯한 아우라'(TV조선)라고 어천가를 불렀던 집단이다. 또한 불과 1달 전만 해도 **故 백남기 농민은 '빨간 우의' 가격으로 쓰러**



졌고, 병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들 아닌가. 더 문제는 이들이 청와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살살이 알고 있었고, 이를 숨겨준 집단이라는 점이다. 언론 개혁은 보도통제에 저항하다 **해직된 언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부에 찍혀 징계로, 좌천으로 한직에 밀려난 언론인도 복귀해야 한다. 정권에 부역하여 보도통제에 응한 사장, 간부들은 철저히 색출하여 몰아내야 한다. 태생 자체가 귀태인 종편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벌 비리 처벌

전경련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엄살을 떨지만, 박근혜 게이트에서 최대 수혜자는 재벌이었다. 14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약에 대해 "재벌 요구의 40%를 수용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재벌들이 정권에 상납한 돈은 기업에게 노동자 임금을 깎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가였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각국은 경제 성장 동력을 재정정책과 분배 개선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재벌일가는 자신들의 영욕을 위해 한국 경제 정체를 무너트리고 있었다. 그러고서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아 세금을 축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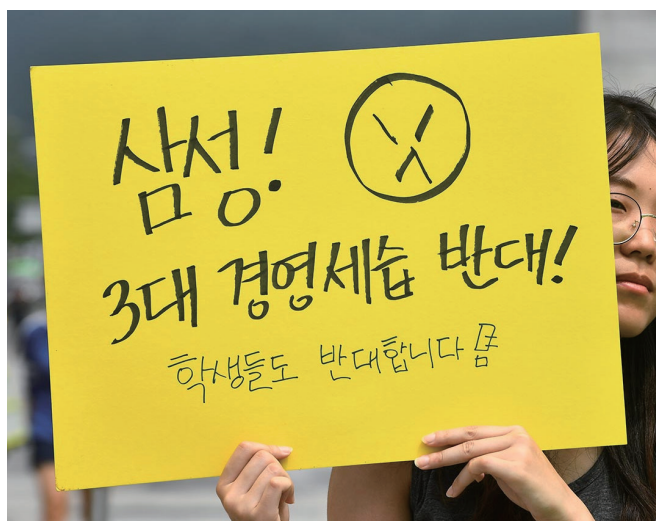
정권에 자금을 상납하며 청탁을 일삼은 재벌들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 기회 놓치지 말자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들 사이의 그물망이 드러나고 있다. 현 국면처럼 사회 전체를 대대적으로 단죄하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부역자 공범들이 청와대로 꼬리를 자르려 시도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고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다.

박근혜 게이트 몸통은 삼성 반헌법적 경영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승마장을 지어줬던 삼성은 앞장서서 다른 재벌들에게 출연을 강요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말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도 10억 원을 들였다.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대줬을 리 만무하다. 2011년 16조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5년 26조 원으로 뛰어올랐다. 200억을 들여 26조를 만들었다니, 진정한 창조경제다.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삼성 3대 세습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어물쩍 완료된 이재용의 재벌 세습이다. 한참 최순실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용은 10월 27일 열린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다. 삼성 입장에서는 몇 년간 시름해 온 3대 세습을 청와대 덕분에 주목 받지 않고 처리했으니 이야말로 자금 상납에 대한 청와대의 살신성인 보은일터다. 삼성은 3대 세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테크윈 등 4개사를 한화그룹으로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도 박근혜-최순실이 개입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도 이재용 세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최순실이 개입한 결과였다.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었고, 최순실 위에는 삼성이 있었다. 한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삼성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왔다.

삼성의 초헌법적 경영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를 깨트리기 위해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해왔다. 불법 경영세습을 위해 국가 재정까지 동원했다. 삼성이 무너뜨린 헌법의 장벽을 다른 재벌들도 따라서 뛰어넘

고 있다. 그 피해는 노동자, 전체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280억을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삼성 직업병 문제를 무마시킨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주목해야 한다. 삼성은 최순실에게 돈을 건넨 후 피해자들과 사과협의를 중단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삼성의 편만 들며 산재사망자가 발생해도 특별근로감독 한 번 나가지 않는 실정이다. 삼성은 초헌법적 지위를 이용해 수백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면죄받는 살인면허를 획득한 셈이다.

삼성을 처벌하라

삼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에 피해를 입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삼성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자행된 비리와 불법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삼성은 국민연금기금에 입힌 피해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불법적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 무노조 경영으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의 반헌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가 재벌의 이익에 복속된 한국의 현실을 바꿔낼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을 바로잡아야 정치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삼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